

전력산업의 발전과 맥을 같이해온 전력노조 60년

이경호 | 전국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

지난 11월 24일, 전국전력노동조합이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동양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한 갑자를 넘겼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 만큼 인생에 대해 큰 경험과 통찰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 식민체제에서의 해방과 함께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혼란의 와중에서 출범한 전국전력노동조합의 60년 역사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노동조합 60년 역사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의 뿌리, 전력노조의 역사

일제하에서의 노동운동은 민족의 독립운동과 궤를 같이 했으며,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조직력아래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일부 의식이 앞선 노동자들이 주도해왔고, 전력노동자들의 노동운동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1945년 해방공간에서의 노동운동 또한 좌우의 이념 대립이라는 당시 사회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좌익계열의 전평과 우익계열인 대한노총간의 각축전

으로 인해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었다. 특히 1945년 8월 18일 경전노조에서 결성된 경전종업원 노조는 당시 좌익계열인 전평조직 결성을 주도하며 전체 종업원의 80%를 조직하는 등 좌익 노동운동의 최선봉에 있었다. 이에 맞서 경성전기자치노조 결성이 우익 인사들의 도움으로 추진되었으나 당시 회사를 장악한 좌익 간부들에 의해 주동자 전원이 해고되는 등 진통을 겪다가 결국 1946년 11월 24일, 오늘날 전력노조의 모체인 경성전기노동조합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출범 이후 경성전기노조는 좌익계열인 경전종업원조합과 치열한 이념대립을 거쳐 종업원 선택투표에 의해 경성전기 유일노조로 인정받게 된다. 전력노조의 전신인 조선전업노조와 남선전기노조 또한 해방당시 이념 대립을 위해 좌우익계의 외부세력에 의해 결성이 주도된 다른 노조와 달리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역사적 평가를 받는 한편, 당시 회사측의 극심한 탄압을 이겨내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례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바 있다. 5.16으로 말미암아 3사 노동조합은 강제 해산되고 이어 전력3사의 통합과 한전의 출범으로 전력노조 또한 통합과 재출범의 소용돌이를 겪는다. 1961년 결성된 전국전력노조는 전국단위의 산별노조로 출범했지만, 6~70년대 급

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극심한 노동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8~90년대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98년의 외환 위기 이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이라는 큰 역사적 물줄기 속에서 전력노동자의 구심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온 것이 노동운동측면에서 본 전력노동조합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노조 60년의 역사가 전력산업의 역사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겼다고는 하지만 봉건체제에서 근대화로 이행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기술축적과 자본축적이 생략된 채 일제에 의한 식민지 체제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자본과 기술에 의한 전력산업의 역사는 사실상 해방이후부터 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1931년 일제는 전국의 배전회사를 4개로 통폐합하고,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43년에는 전시물자 조달을 위해 조선전력관리령을 시행, 전국의 발전사업을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방직후 남한의 전력산업은 일제의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2개의 배전회사와 1개의 발전회사 체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일제의 강제 수탈로 형성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랬듯이 해방직후 경성전기에도 좌익계열의 경전종업원조합이 공장 자주관리를 명분으로 회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경영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이에 맞서 결성된 경전자치노조는 이념에 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임금, 복지, 고용, 근로조건 등 현실운동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여 종업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전력산업계의 노사문제를 정상화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왔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측면에서도 그나마 얼마 안되는 남한의 전력설비 조차 거의 파괴시킴으로써 전력산업의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된다. 당시 수도권에 파괴된 전력설비를 복구하기 위해 전력노동자들은 무임금으로 복구사업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파괴된 전차와 송변전설비, 발전설비 등 전력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 채 복구작업을 벌임으로서 처참하게 파괴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키웠던 것이다. 고도성장의 필수 원동력인 전력산업의 확충이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경제개발시기에는 전력노동자들이 그야말로 혼을 바쳐 설비확충에 전념해왔다. 61년 당시 36만kW에 불과했던 전력설비가 오늘날 6천만kW가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전력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발전설비 확충과 농어촌전력화사업에 이어 90년대의 급속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전력설비 건설에 이르기 까지 그야말로 전력산업의 발전과정은 전력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술 집약의 과정이었다고 감히 자부해 본다.

또한 전력노동조합은 전력산업의 주체로서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해 왔다. 1950년대에는 전력3사의 강제 통합 반대 운동과 더불어, 60년대의 전차사업 폐지 및 이관 등 당시 주요 산업정책에 대해 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왔다.

특히, 98년 외환위기와 함께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력노동조합의 역할은 단순히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십분 발휘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당시에는 외환위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절박성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을 간과한 채 검증이 안 된 설부른 경쟁체제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당시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뜻있는 전력인 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대해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급속한 민영화와 경쟁체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반대를 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전력산업구조개편 반대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활동을 펼쳤다. 전력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전의 발전부문이 분할되고, 발전경쟁이라는 무모한 정책실험이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예정된 2단계 구조개편 정책의 핵심인 배전분할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된 전력노조 집행부가 정책검증을 끈질기게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동연구단을 구성,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전반에 걸쳐 새로운 검증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배전분할 정책은 기대편익보다는 오히려 요금상승과 공급불안을 가져오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국내외 실사와 전문가 토론회 등 연구과정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주장해온 전력노동조합의 합리적 정책요구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배전분할 정책이 중단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력노동조합의 60년은 전력산업 정책의 방향에 따라 노동조합 또한 큰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더불어 전력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점에서 전력산업의 역사야말로 전력노동조합

의 60년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것이다.

전력산업정책, 노동조합도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력노조의 60년 역사는 노동운동사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의 역사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전력산업 발전과정에서 전력노동자들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정책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주체는 전력노동조합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0년의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던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사회적 역할도 주어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 전력노동조합은 지난 60년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전력노조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인, 나아가 전력인 전체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